

# 국제해양정세리포트

No.21

2024/5

발행인 김종덕 | 총괄 박수진 | 감수 최지연 | 담당 이서희·황수연

Email dokdo.oceanlaw@kmi.re.kr

발행처 한국해양수산개발원 | 주소 49111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동삼동) | 문의 독도·해양규범연구실(051-797-4707)

## Contents

### 국제법원

#### 국제사법재판소(ICJ) ..... 2

기후변화 국가책임 관련 국제법원 권고적 의견 현황 분석

### 지역별 동향

#### 아시아 ..... 6

중국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위법성 및 무효성에 관한 중국의 입장  
 중국 통킹만 북부에 새로운 영해기선 설정  
 필리핀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베트남,중국 베트남-중국 해양문제 합의

#### 아시아,북아메리카,오스트레일리아 ..... 17

필리핀,미국,일본,호주 해상 협력활동을 위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공동성명서 발표

### 행사안내

#### 3개월 내 행사 계획 ..... 20



한국해양수산개발원  
KOREA MARITIME INSTITUTE

국제해양정세리포트는 최신 글로벌 동향을 소개하는 월간지로 이메일로 배포하고 있으며,  
 홈페이지(www.kmi.re.kr)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 수신을 원하시는 분은 전화(051-797-4707) 또는 이메일(dokdo.oceanlaw@kmi.re.kr)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국제사법재판소

## ICJ

전문연구원 민영훈

## 기후변화 국가책임 관련 국제법원 권고적 의견 현황 분석

## 서론

1992년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2015년 파리협정 등이 글로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채택됐지만,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실질적인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과 국가별 온실가스 배출 감축량 목표 사이에는 여전히 격차가 존재한다. 이에 2023년 4월 유엔총회(UNGA)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국제사법재판소(ICJ)에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으며, ICJ는 2024년 4월까지 국가별 서면 의견을 제출받았다. 기후변화 국가책임에 관한 ICJ의 권고적 의견 결과가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바, 이 글에서는 타 국제법원의 결정이 ICJ의 입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살펴본다.

## 유엔해양법협약(UNCLOS)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의해 설치된 국제사법기구로서 협약의 해석과 적용에 관한 분쟁을 판단한다. 소도서국 위원회(COSIS)는 이러한 ITLOS의 권한과 기능에 초점을 두어 2022년 12월 12일 유엔해양법협약 상 기후변화와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을 요청했다. COSIS는 이 요청을 통해 ITLOS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양환경오염을 예방, 감소 및 통제하기 위한 협약상 국가의 구체적인 의무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다.

ITLOS는 COSIS의 권고적 의견 요청과 관련하여 2023년 6월 16일까지 국가와 관련 기관들에게 서면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해당일까지 제출된 53건의 서면의견에는 해양 기후변화에 있어 국가책임에 관한 다양한 견해를 포함하고 있다. 일부는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포함한 집단적 감축 의무를 지지하는 반면, 또 다른 일부는 UNFCCC에 반영된 원칙인 공통의 차별화된 책임이 해양 기후변화에 관한 국가책임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부 소수는 해양 기후변화에 관한 당사국의 의무를 유엔해양법협약에서 다루기보다 UNFCCC 등 기후 협약의 범위 내에서 다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유엔해양법협약이 기후변화를 직접적으로 다루지는 않지만, 협



## 국제사법재판소

## ICJ

약은 해양환경의 보호 및 보존에 관한 국가의 일반적 의무와 해양환경 오염의 방지, 경감 및 통제에 관한 국가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유엔해양법협약 제12부, 특히 제192조 및 제194조). 또한 2019년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해양 온난화, 해수면 상승, 해양 산성화 등 기후변화가 해양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관해 보고서를 발표했다. 결국, 유엔해양법협약의 관련 규정과 IPCC 보고서의 내용을 고려하면, 온실가스(GHG) 배출로 인한 해양의 부정적 영향은 유엔해양법협약 상 해양오염의 정의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ITLOS는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에 있어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 요청을 인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권고적 의견과 관련하여 구두절차는 2023년 9월 11일에 시작되었으며, 최종결과는 2024년 5월 21일에 발표될 예정이다. ITLOS 권고적 의견은 다른 국제법원과 마찬가지로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법적 권위를 갖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특히 금번 ITLOS의 권고적 의견은 기후변화와 해양환경을 연계하여 국가의 책임에 있어 관련 협약 간 법적 상호작용을 다루는 국제법원의 첫 번째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미주인권재판소(IACtHR)

기후변화가 인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면서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과 관련하여 국가의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요구가 증대하고 있다. 특히, 미주 인권 제도는 인권에 대한 기후변화의 영향을 인권 확보 및 보호에 주요 현안으로 다루고 있다. 미주인권재판소(IACtHR)는 2017년 콜롬비아의 요청에 따라 건강한 환경에 대한 권리를 인권으로 인정하는 권고적 의견을 발표했다. 또한 미주인권재판소는 미주인권협약 상 국가의 역외의무(extraterritorial obligations)를 인정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손해를 포함하여 개인이 초국경적 환경 피해에 대해 관련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

기후변화 인권과 관련하여 2023년 칠레와 콜롬비아는 미주인권재판소에 권고적 의견에 관한 요청서를 제출했다. 이 요청은 기후 비상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개별 국가의 의무를 비롯하여, 지역 및 단체로서 국가들의 의무 범위를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특히, 인권에 대한 영향을 예방하고 완화할 의무, 파리협정 준수 활동, 적응 및 완화 조치, 기후 관련 손실과 피해의 관리, 기타 이행조치 등 기후 비상사태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국가 의무의 본질에 대해 재판소가 판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요청은 또 다른 쟁점으로서 생명권에 내재된 의무, 아동과 신세대의 권리, 국가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 등 또한 재판소가 다루어야 할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 국제사법재판소

## ICJ

이러한 권고적 의견 심리와 관련하여 재판소는 이해관계자들에게 2023년 12월 18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9개 국가를 포함한 다양한 기관에서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2024년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바베이도스에서, 5월 24일과 27일부터 29일까지 브라질에서 비정부기구(NGO)와 시민사회를 위한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현재 미주인권재판소의 이 권고적 의견에 관한 절차는 국제재판소 중 가장 넓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하고 있어(1,000명 이상의 개인과 단체가 256개 이상의 의견서를 제출), 추후 결과에 따라 광범위한 법적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유럽인권재판소(ECtHR)

2024년 4월 9일 유럽인권재판소(ECtHR)는 기후변화와 인권에 관한 세 가지 주요 판결을 내림으로써 모든 유럽 법원을 구속하는 중요한 판례를 확립했다. ‘*Verein KlimaSeniorinnen Schweiz*와 *대 Switzerland* 사건’ 소송에서 유럽인권재판소는 국가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으로부터 개인을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의 기후 정책에는 인권 기준이 적용되므로 국가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시의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 결론 및 정책적 시사점

ITLOS, 유럽인권재판소, 미주인권재판소의 소송 및 권고적 의견 요청은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국가 책임을 명확히 하여 국가가 기후변화를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국제법원의 절차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절차 참여인 및 기관의 자격(청구인 포함)을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 조치에 있어 환경권으로서 인간의 기본권이 연관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법원들의 결과들이 ICJ를 구속하는 것은 아니지만, ICJ의 기후변화 국가책임에 관한 권고적 의견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ICJ가 요청된 권고적 의견을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도록 하는 외부적 압력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일련의 결과들은 기후변화의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기후변화대응 정책은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기술개발 정책 위주로 수립되어 있다. 이는 변화하는 기후변화 글로벌 레짐을 충분히 반영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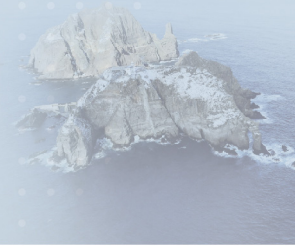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 국제사법재판소

#### ICJ

있지는 못한 측면이 있다고 보인다. 특히, 초국경적 오염으로서 기후변화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포함될 경우에 보호해야 하는 개인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할지 그리고 기후변화를 방지하기 위한 국가의무를 만족하기 위해 국가가 어느 정도의 주의를 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Center for International Environmental Law(CIEL)(2024.4.18.), The Inter-American Court of Human Rights Must Prioritize Corporate Accountability in Climate Opinion, <https://www.ciel.org/inter-american-court-hr-hearings/>(검색일:2024.5.14.) [2] IISD(2024.5.2.), Ongoing Climate Proceedings: Setting the Stage for ICJ's Opinion, <https://sdg.iisd.org/commentary/policy-briefs/ongoing-climate-proceedings-setting-the-stage-for-icjs-opinion/>(검색일:2024.5.14.) [3] 탄소중립 정책포털, 탄소중립기본계획, <https://www.gihoo.or.kr/menu.es?mid=a30201000000>(검색일:2024.5.14.)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민영훈

## 남중국해 중재판정의 위법성 및 무효성에 관한 중국의 입장

지난 4월 중국 외교부 조약법률국(Department of Treaty and Law) 국장(Director-General) 마신민(Ma Xinmin)은 Global Times에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한 위법성과 무효성을 주장하는 글을 기고했다. 이는 남중국해 중재판정에 대한 중국 외교부의 공식적인 입장 및 분석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1. 남중국해 시사제도(영문명: 파라셀제도)



그림 출처: Global Times(2024.4.30.)

## 중재재판소의 월권

먼저 중국은 당시 중재재판소가 유엔해양법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영토 주권 분쟁에 대한 관할을 인정하면서 ‘물적 관할권(jurisdiction *ratione materiae*)’의 범위를 벗어났다고 주장한다.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 필리핀이 제기한 모든 청구는 본질적으로 남중국해의 해양 지형에 대한 영유권 분쟁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중국이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강제 절차 제외를 선언한 해양 경계획정 분쟁 사건에 대해 중재재판소가 관할권을 행사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분쟁의 평화적 해결 수단을 선택할 수 있는 당사국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한다. 중국과 필리핀 간 협상을 통한 분쟁 해결이 함의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중재재판소가 해석한 것은 협약의 관련 규정에 반한다는 것이다.



## 아시아

### 중국

더불어 중국은 재판부가 non-ultra petita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한다. 이는 소송에서 청구한 것 이상으로 재판부가 인용할 수 없다는 원칙인데,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 필리핀이 태평도, 난사군도 등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대한 확인 청구가 없었음에도 재판부가 난사군도의 지위를 암석으로 인용한 것은 '청구초과금지 원칙(non-ultra petita)'을 심각하게 위반했다는 것이다.

#### 중재재판소의 위법성

중국은 또한 중재재판소가 일반국제법이 해양 영유권 주장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했다고 주장한다. 중재재판소는 유엔해양법협약과 일반국제법 간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반국제법상 역사적 권원에 관한 정립된 법원칙을 무시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국제법상 역사적으로 정립된 대륙국가의 외해 군도 제도를 무시했다고 주장함과 동시에 유엔해양법협약 제121조 섬제도에 명시된 규정을 무시하고 증거와 적법절차와 증거규칙을 무시했다고 주장한다. 즉, 중국은 이러한 근거에 기초하여 중재재판소의 결정의 위법성을 주장하고 있다.

#### 중재재판소의 권한 남용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국제법을 해석하고 적용하는데 있어 '신의성실 원칙'을 지키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특히, 중재재판소가 난사군도 및 중사군도와 관련된 영유권 분쟁을 개별 해양 지형에 따른 개별 사건으로 파편화하여 영유권에 관한 본질적 쟁점을 우회하여 접근했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일반국제법의 중요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유엔해양법협약을 해양 관할권 주장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다고 주장한다. 이는 중재재판소가 청구된 사건에 대해 일반국제법의 적용을 의도적으로 우회한 것으로 중재재판소의 권한을 남용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관습국제법을 조약법으로 대체하여 적용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조약법과 관습국제법이 구분되어 존재한 것을 무시한 것이라 주장한다.

#### 중국의 난사군도에 대한 권리 주장의 부인

중국은 남중국해 중재사건에서 근본적으로 난사 군도에 대한 영토 주권과 해양 관할권을 주장하고 있지만 중재재판소는 이를 거부했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먼저 역사적으로 대륙국가의 외해 군도 제도는 유엔해양법협약이 체결되기 전부터 관습국제법으로 정립되었다고 주장한다. 이 문제는 유엔해양법협약 협상에서 국가들에 의해 거부된 것이 아니고 중지되었을



## 아시아

### 중국

뿐, 협약에서 다루어지지 않고 관습국제법에 의해 지속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관행에서 대륙국가들이 외해 군도 전체에 대해 관할권을 주장하는 경우를 다양하게 확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의하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약 20개 대륙국가가 외해 군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17개 국가가 외해 군도에 대해 직선기선을 설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관행은 공통되고 일관적인 국가관행을 형성하여 ‘법적 확신 (opinio juris)’을 부여하기 충분하며 결과적으로 관습국제법을 구성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은 난사군도를 포함하여 동사군도, 시사군도, 중사군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영토 주권과 해양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행사해 왔다고 주장하고 따라서 중재재판소가 난사군도를 세분하여 개별 지형에 대한 법적 지위와 분쟁을 판정한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판단이라 주장한다.

#### 중국의 역사적 권리 주장의 부인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이루어지는 자국의 모든 활동 즉 항해, 어업, 자원개발 및 기타 활동이 역사적 권리를 근거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이러한 역사적 권리는 국내법과 국제법, 역사적 증거를 통해 뒷받침된다고 주장하며, 중재재판소가 이에 반하여 중국의 남중국해에 대한 권리가 천연자원에 한하고, 공해의 자유에 근거하여 행사해야 한다고 결정한 것은 중국의 역사적 권리를 잘못 이해한 것이라 비판한다.

#### 남중국해 중국활동의 불법성에 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

마지막으로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남중국해의 법적 지위를 잘못 인식하여 사실확인에 착오가 생기고 관련 국제법의 해석과 적용을 주관적으로 판단했다고 주장하며, 결국 중국의 남중국해 활동에 대한 중재재판소의 결정은 전적으로 잘못된 것이라 주장한다. 이를 위해 중국은 중재재판소가 사실을 오인하고 위법한 주장에 근거하고 있으며, 역사적 해역인 남중국해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또는 대륙붕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 결론 및 정책적 함의

2024년 4월에 게재된 중국 외교부 국장 마신민의 기고는 2016년 남중국해중재판정이 나올 당시 중국의 입장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특히 중국은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에 따라 당시 설치된 중재재판소가 ‘소의 허용성 (admissibility)’을 다룰 때부터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 대상은 영토 주권에 관한 사항이며, 따라서 유엔해양법협약의 분쟁해결 절차가 적용될 수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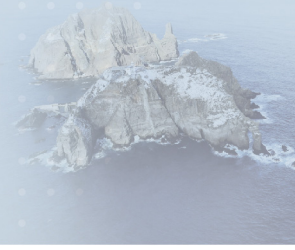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 아시아 중국

을 주장해 오고 있다. 다만, 과거와 달리 이번 기고에서 특징적인 것은 과거 중재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 주장에 대해 증거가 없다고 판정한 것에 대해 중국은 국내법과 국제법, 역사적 증거가 뒷받침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중국이 자국이 주장하는 당시 9단선과 남중국해 역사적 권리에 관한 증거를 확보했는지는 확인이 어렵다. 다만, 중국은 2016년 남중국해 중재판정 이후 지속적으로 남중국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많은 연구를 국내·외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는 중국과 서해를 사이에 두고 서로 대항하고 있으며, 중국의 서해 내해화 또는 서해에 대한 역사적 권리 주장 시도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리고 남중국해 중재 사건을 통해 알 수 있듯 중국은 역사적 권리가 미치는 해역은 자국의 주권이 미치는 영역으로 인식하여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해역별 국가 권리보다 자국의 질서를 강조한다. 따라서 우리나라 서해 또한 중국의 남중국해 중재사건과 같은 대상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출처 : [1] Global Times(2024.4.30.), The illegality and invalidity of the so-called South China Sea arbitration awards, <https://www.globaltimes.cn/page/202404/1311540.shtml>(검색일: 2024.5.14.) [2] 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2016.7.12.), The South China Sea Arbitration(The Republic of Philippines v.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https://pca-cpa.org/en/cases/7/>(검색일: 2024.5.14.) [3] The Guardian(2016.7.12.), Beijing rejects tribunal's ruling in South China Sea case, <https://www.theguardian.com/world/2016/jul/12/philippines-wins-south-china-sea-case-against-china>(검색일: 2024.5.14.)



## 아시아

## 중국

전문연구원 이 서 희

## 중국, 통킹만 북부에 새로운 영해기선 설정

현재 중국은 남중국해에 9단선(九段線)을 설정하여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등과 갈등을 빚고 있다. 특히, 최근까지 필리핀과의 충돌이 빈번하였다.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9단선이 무효라는 판정을 내렸으나, 중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중국은 통킹만에 접한 본토와 하이난다오 썰물로 인해 해수면이 가장 낮아졌을 때 해안선인 저조선을 기선으로 영해를 설정하였다. 그런데 지난 2024년 3월, 중국이 통킹만 북부에 새로운 영해 기점 7곳을 직선으로 잇는 기준선을 영해기선으로 삼겠다고 발표하였다. 이 영해기점은 기존 해안선보다 최대 24해리(44.4km)까지 떨어진 곳도 있는 등 사실상 영해를 확장하는 시도나 다름없기에 주변국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중국은 이와 관련하여 새로운 기점 발표는 강력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중요한 절차라고 밝혔다. 또한, 중국은 자국이 발표한 새로운 기점이 유엔해양법협약 상 '영구적으로 해수면 위에 있는 등대나 이와 유사한 시설이 간조노출지에 세워진 경우' 직선기선 기점으로 설정할 수 있다는 조건에 따라 문제가 없으며, 베트남과 2000년에 체결된 통킹만 해양경계획정과도 일치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중국 관리들은 이 기준선이 국내법과 국제법에 따라 설정되었다고 주장하였다.

베트남 외교부는 중국을 대상으로 통킹만에서 양국의 영해, 배타적 경제 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에 관한 합의와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준수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아울러 베트남은 지난 4월에 '지리 통킹만 (Vinh Bac Bo)'이라고 불리는 수로에서 자국 영해를 표시하는 새로운 기준선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  
중국

그림 2. 중국이 설정한 새로운 영해기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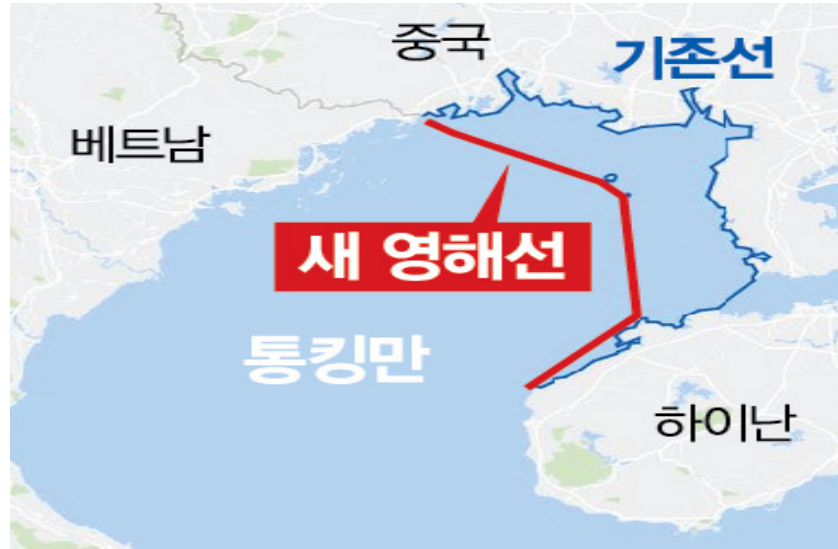


그림 출처: 서울경제

### 각국 전문가의 평가

호주 전문가는 중국이 자국의 해양구역을 확장하기 위해 베트남과 중국이 2000년에 체결한 통킹만 경계협정협정의 개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중국이 자의적으로 새롭게 설정한 기준선은 베트남의 주권을 영향을 주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베트남은 중국의 일방적인 행동에 우려를 표명하였다.

일본 전문가는 새로운 기준선 설정으로 인해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 상당 부분이 영해 또는 내수로 전환되어, 중국이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중국이 새로운 기선을 설정한다고 해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라 해당 해역의 무해·통과 통항권이 유지되지만, 중국이 다른 해석을 통해 외국 선박의 항해를 방해할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필리핀 전문가는 중국이 영유권을 확장하고 내수를 최대한 넓혀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권리를 남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카네기 국제평화기금 아시아 프로그램(the Carnegie Endowment for International Peace’s Asia Program)’의 선임연구원 아이작 카든(Isaac Kardon)은 양국 간 실제 해양경계선이 중국의 일방적인 조치에 따라 변경된 것은 아니지만, 중국이 새롭게 발표한 경계선은 유엔해양법협약이 허용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으로 보았다.

이외에도 중국의 새로운 기준선은 국제수역을 평균 37~56km 정도 침범

### 아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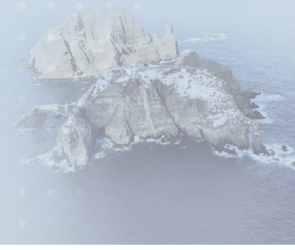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 중국

할 뿐만 아니라, 하이난 해협(Hainan Strait)으로도 알려진 청취우 해협(Qiongzhou Strait)을 통과하는 항해의 자유를 저해한다는 비판도 있었다.

#### 정책적 시사점

최근 중국의 영토확장 행보는 과감해지고 있다.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뿐만 아니라 이번 통킹만 북부 영해기선 설정이 비단 이웃국 간 갈등으로 간주할 수 없는 이유는 이와 같은 중국의 행보가 한반도까지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이 우리나라와 물리적 거리가 매우 가까운 국가인 만큼 우리나라는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영토문제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출처 : [1] Indo-Pacific Defense Forum(2024.04.20.), Vietnam considers territorial line in Gulf of Tonkin after PRC's 'excessive' move, <https://ipdefenseforum.com/2024/04/vietnam-considers-territorial-line-in-gulf-of-tonkin-after-prcs-excessive-move/>(검색일: 2024.05.09.)  
[2] Deccan herald (2024.04.14.), China's aggressive actions in SCS fuel regional tensions, <https://www.deccanherald.com/world/china-s-aggressive-actions-in-scs-fuel-regional-tensions-2977077>(검색일: 2024.05.09.) [3] 뉴스1(2024.03.20.), "중국, 통킹만서 새 '영해선' 설정...남중국해 확장 우려 커져" <https://www.news1.kr/articles/5356862>(검색일: 2024.05.09.)



## 아시아

## 필리핀

전문연구원 이서희

## 필리핀-뉴질랜드,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심각한 우려 표명

필리핀 마르코스 대통령과 뉴질랜드 크리스토퍼 룩슨 총리는 4월 18일에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양국은 2026년까지 “포괄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하기로 합의하였으며, 파트너십 강화를 위한 로드맵을 만들기로 합의하였다. 이 로드맵은 양국 간 해양 관련 논의를 위한 새로운 방식을 포함할 것이다.

양국은 공동성명에서 해양 문제를 다루었다. 먼저, 남중국해 상황에 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양국은 유엔해양법협약이 모든 해양활동에 관한 법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유엔해양법협약 상 분쟁해결 방식의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 무엇보다도, 필리핀이 2016년에 제기한 소송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 판정이 최종적이고 구속력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그러나 중국이 이 중재판정을 거부하면서 서필리핀해와 겹치는 부분을 포함하여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여전히 주장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면서, ‘남중국해 행동강령(COC)’의 조기 체결을 위한 아세안의 노력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양국은 태평양 해양국가로서 해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위한 공동의 이익을 인식하고 이와 관련된 공동 위협에 대한 대처와 해양법 집행을 위한 협력을 기대한다는 점을 밝혔다.

그 밖에도 양국은 이 성명에서 해양에서의 양자 및 다자활동, 역량 강화를 위한 노력을 포함하여 해양안보 협력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아울러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 상 항행 및 상공비행의 자유를 재확인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남중국해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와 유럽 및 아프리카를 연결하는 매우 중요한 바다이다. 아울러 남중국해는 동남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연결하는 요충지 중 하나이며, 남중국해의 석유 및 천연가스 매장량은 상당하다. 또한, 남중국해는 예전부터 다수의 국가들이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관련한 분쟁도 자주 발생하였다. 따라서 남중국해 문제는 전 국제사회의 관심 사안일 수밖에 없다. 필리핀은 남중국해와 관련하여 중국과의 갈등 해결을 위해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오세아니아의 뉴질랜드까지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러한 상황을 지속적으로 주시하면서, 남중국해 문제해결을 위한 국제적 차원의 협력에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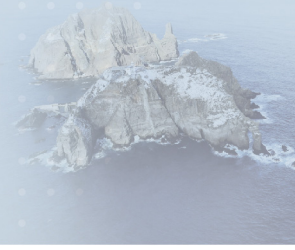


### 아시아

#### 필리핀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출처 : [1] Gma News Online(2024.4.18.), "Marcos, NZ PM Luxon express 'shared serious concern' over South China Sea issues", <https://www.gmanetwork.com/news/topstories/nation/904086/marcos-nz-pm-luxon-express-shared-serious-concern-over-south-china-sea-issues/story/>(검색일: 2024.5.9.)



## 아시아

## 베트남-중국

전문연구원 이 서 희

## 베트남-중국 해양문제 합의

베트남과 중국은 지난 4월 8일에 무역 확대와 해양분쟁 관리에 합의하였다. 양국은 입법활동의 상호 검토 및 협력 도모,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지속적인 발전, 베트남-중국 공동체 건설, 공동성명의 효과적 이행에 합의하였다.

또한 양국은 해양문제에 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남중국해 분쟁의 적절한 관리, 평화와 안정 유지에 만장일치로 합의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하에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남중국해 행동강령(COC)' 체결을 위한 협상의 가속화와 지역 및 국제פור姆의 조정과 협력에 합의하였다. 특히, 베트남은 수색 및 구조를 위한 협력, 어업활동을 위한 핫라인의 효과적 이행, 새로운 통킹만 어업협정의 체결을 촉구하였다.

양국의 해안경비대 함대는 4월 27일~29일에 통킹만 인근에서 합동 순찰을 실시하였다. 순찰은 총 49시간 동안 255.5 해리에 걸쳐 지속되었는데, 중국 4척과 베트남 39척 등 43척의 어선을 기록 및 검사하고 12척의 선박 선원들에 대한 경고 활동을 하였다.

양국은 이 순찰이 통킹만 수산자원의 보존과 어업생산의 질서 유지, 해양범죄에 대한 공동 대처, 지역안보 및 안정 보장에 도움이 되었으며, 남중국해 국제해양법 집행 협력의 모델이 되고 있다고 하였다. 아울러 이 순찰은 양국 해안경비대 간 협력의 구체적인 조치로서 매년 두 차례 실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 해안경비대는 이 순찰이 베트남과의 상업적 교류 및 협력을 강화하고 해양 비상사태를 대비할 것이라고 하였다.

## 정책적 시사점

남중국해는 중요한 국제 해상 교통로이므로 여러 국가의 이익과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을 받아들이지 않고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하면서 여러 환초에 기지를 건설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중국은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남중국해에서 직접적인 갈등을 빚고 있는데 베트남도 그 국가 중 하나이다.



## 아시아

앞으로의 상황을 살펴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중국이 베트남과 남중국해 문제에 관해 합의하고, 합동순찰에 응했다는 것은 일정 부분 대립에서 협력으로 관계 변화를 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중국은 주변국과의 합의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할 것이다.

출처 : [1] ChinaDaily(2024.05.01.), China, Vietnam complete joint coast guard patrol, <https://www.chinadaily.com.cn/a/202405/01/WS663189bea31082fc043c4f9f.html>(검색일: 2024.05.09.) [2] Viet Nam News(2024.04.08.), Viet Nam, China agree to expand trade, promote appropriate management of sea disputes: parliament leaders, <https://vietnamnews.vn/politics-laws/1653541/viet-nam-china-agree-to-expand-trade-promote-appropriate-management-of-sea-disputes-parliament-leaders.html>(검색일: 2024.05.09.)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 미국, 호주**

전문연구원 이 서 희

**해상 협력활동을 위한 미국-일본-필리핀-호주 공동성명서 발표**

미국-일본-필리핀-호주는 4월 5일에 ‘해상 협력활동(Maritime Cooperative Activity, MCA)을 위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 성명서에서 4개국은 2016년 남중국해 문제에 관한 상설중재재판소의 판정이 분쟁 당사자에 대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하였다.

호주는 모든 국가가 국제법, 특히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방식으로 항행의 자유를 포함할 권리와 자유를 행사해야 한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왔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호주는 국제규범을 기반으로 한 질서 유지를 위해 필리핀·일본·미국과 협력하고 있다고 하면서, 국가 주권에 대한 존중과 국제법을 근거로 합의된 규칙 및 규범을 통해 자국이 안정될 수 있다고 하였다. 호주는 필리핀·일본·미국과의 해상 협력활동이 자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

일본의 경우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FOIP)’이라는 비전에 따라 법치에 기반한 자유롭고 개방적인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동맹국과 협력하여 지역의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일본은 남중국해 문제가 지역의 평화와 안보에 직결될 뿐만 아니라, 필리핀·호주·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관심사임을 환기하면서, 무력을 수반한 일방적인 현상변경과 남중국해의 긴장을 야기하는 모든 행위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필리핀은 자국이 시행 중인 ‘포괄적 군도 방위 개념(Comprehensive Archipelagic Defense Concept, CADC)’에 유엔해양법협약 상 평화와 안보, 해양질서 유지를 위한 모든 국가와의 협력 및 상호 운용성 강화가 포함된다고 주장하였다. 아울러 필리핀은 양자 및 다자 간 해상 협력활동이 자국의 개별적·집단적 자위 역량을 구축하기 위한 단계라고 하였다.

미국은 모든 국가가 항공 및 해상 작전을 자유롭게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아울러 미국은 동맹국인 필리핀·호주·일본과의 공동작전이 평화와 안보를 지지하는 행동의 일환이라고 주장하였다.



##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 미국, 호주

### 미국-일본-필리핀-호주 합동해상훈련 실시

이 공동성명서에서 4개국은 2024년 4월 7일 필리핀의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합동 해상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 훈련은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와 해양권에 대한 존중, 인도 태평양 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협력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합동 해상훈련은 4개국의 해군 및 공군 부대가 국제법은 물론 국내법에 부합하는 방식이라고 하면서, 항행 안전과 다른 국가의 권익을 충분히 고려하여 수행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합동 해상훈련은 해군과 공군 간 전문적인 상호작용을 보여줄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국방/군사이론 및 전술/기법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임을 밝혔다. 한편, 필리핀군은 이 훈련이 국제협력을 강화하겠다는 4개국의 각오를 보여준 것이라고 하였다.

예정대로 진행된 이번 합동 해상훈련은 중국의 공세적 행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시행된 것이다. 이에 중국군은 남중국해를 분쟁지역으로 만드는 모든 군사활동을 통제하고 있으며, 합동 해상훈련에 대해 해상 및 공중 순찰을 실시함으로써 맞대응하였다.

그림 3. 2024년 4월 7일, 호주, 일본, 필리핀, 미국의 남중국해 합동해상훈련 모습



그림 출처: Kyodo News

### 정책적 시사점

2016년 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여전히 남중국해에 대한 자국의 권리를





## 아시아, 북아메리카, 오스트레일리아 필리핀, 일본, 미국, 호주

주장하고 있으며, 특히 필리핀과 빈번하게 충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필리핀이 일본·미국·호주와 연계하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한 후 실시한 합동 해상훈련은 중국에 큰 부담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합동 해상훈련은 중국에 국제법 준수를 촉구하기 위한 방안이 될 것이다.

현재 국가들이 국제법을 위반했을 때, 국가를 처벌할 수 있는 제3자적 기관은 부재하다. 따라서 이번 사례는 국제법 위반국에 이를 준수하도록 요구하는 수단으로서 합동 해상훈련의 활용 가능성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출처 : [1] U.S. Department of Defense(2024.04.05.), JOINT STATEMENT: Australia - Japan - Philippines - United States Maritime Cooperative Activity. <https://www.defense.gov/News/Releases/Release/Article/3733095/joint-statement-australia-japan-philippines-united-states-maritime-cooperative/> [2] KYODO NEWS(2024.04.08.), Japan, U.S., Australia, Philippines hold drill in South China Sea, <https://english.kyodonews.net/news/2024/04/f4951e0621b7-japan-us-australia-philippines-hold-drill-in-south-china-sea.html>(검색일: 2024.05.09.)



## 3개월 내 행사계획

### 제4차 플라스틱 오염에 관한 정부간 협상위원회 | 2024년 4월 23일 ~ 4월 29일 / 캐나다 오타와

- 주요 내용 플라스틱 오염을 종식하기 위해 플라스틱 생산부터 폐기까지 전 주기에 걸쳐 규제하는 국제협약 초안 마련, 1차 플라스틱 폴리머 감산, 플라스틱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의 규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친환경 플라스틱 사용 제고 등 생산단계 규제 포함 여부 등 쟁점 논의

### 국제법평론회 춘계학술대회 | 2024년 4월 26일 / 온라인 화상회의(Zoom)

- 주요 내용 미국의 국제적 합의 체결 관행, 국제사법재판소의 법적 확신 검증(니카라과 대 콜롬비아 사건), 유전자원 기반 특허출처공개 의무

### 군서도서개발도상국 국제회의(SIDS4) | 2024년 5월 27일 ~ 5월 30일 / 앤티가바부다

- 주요 내용 지속가능개발 진행 상황 검토, 번영을 위한 새로운 향후 10년간 파트너십과 솔루션 제안

### 제34차 유엔해양법협약 당사국총회 | 2024년 6월 10일 ~ 6월 14일 / 뉴욕

- 주요 내용 국제해저기구 사무총장 보고서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장 보고서 검토, 국제해양법재판소 예산 사항 검토, 대륙붕한계위원회 위원 2명 선출

###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일명, 유엔 BBNJ협정'에 관한 정부간 회의 | 2024년 6월 24일 ~ 6월 26일 / 뉴욕

- 주요 내용 공해, 심해저 등 국가관할권 이원지역 해양생물다양성의 보전과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협정의 발효 등을 준비하기 위한 세부사항 논의

### 로도스 아카데미 | 2024년 6월 23일 ~ 7월 12일 / 그리스, 로도스 섬

- 주요 내용 유엔해양법협약 및 국제법 현안 관련 강의